“검찰개혁 추석 전 얼개 가능… 금융시장 투자 유도”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검찰개혁 필요성 커져 ‘자업자득’…민생안전에 ‘총력’
관세협상 어렵지만 최선…북핵 등 한일 협력분야 많아
민생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 없어…의정갈등 대화로 해결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강력한 정책수단 활용을 예고했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관련된 정책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고밀화할 수도 있다”고 예를 들며 “수요 억제책도 (이번 대책) 외에도 많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불허하는 등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대신 금융시장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와중에 투기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며 “흐름을 바꾸려고 한다.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꼽히는 신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정책과 관련해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고,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더 편성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 재정 상황이 또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 측면이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며 “여기에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권력기관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의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얘기하는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으로)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며 “(대통령이)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제 몫이 아니다”라며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도 국회에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 받는 게 좋다”며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 4.5일 근무제’ 도입 시기와 관련해선 “우리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면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갈등이 심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정 갈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다. 정부가 바뀌면서 불신 같은 게 조금 완화된 것 같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등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려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다”며 “이른 시일 안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협상 진행 상황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며 “(현재 협상 시한으로 알려진)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해 서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 문제나 경제 사안 등에서 협력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방송 중단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기대 이상이었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긴장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통시장·소상공인 경영애로 청취를 위한 금융버스 ‘가드림’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위촉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일 구례5일시장에서 전통시장·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상담 업무를 지원하며 고충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제공=전남도

김영록 지사 “지역경제 숨통 트이게 하겠다”

구례 5일시장서 민생금융 소통…금융지원 방안 모색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일 구례 5일시장을 찾아 전남신용보증재단의 ‘금융버스 가드림’ 일일 명예지점장으로 나서며 현장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내수 침체와 고금리 이중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정선 전남소상공인연합회장과 한승주 전국상인연합회 전남지회장, 시군 상인회장, 구례군 소상공인 등 20여 명이 참석해 김 지사와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김 지사는 이후 금융버스 명예지점장으로 나서 소상공인들과 1대1 금융상담을 시연하고, 상담을 통해 직접 확인한 생계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 추경과 연계한 전남형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자금 지원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비로 조기 발행한 35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더해, 정부 추경에 맞춰 총 8000억 원 규모로 상품권 발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자금 숨통을 틔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도는 금융 소외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버스 가드림’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첫 도입된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금융 협력모델 집중관리사업에 선정되고, 전남도 도민평가단이 뽑은 2024년 최우수 시책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올해부터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버스형 이동점포를 직접 구입해 운영을 확대했다.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되며 상반기만 해도 20회 운영, 총 89억 원 규모의 보증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지점 방문이 어려운 영세 상공인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큼 주목받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

전남도, ‘우리아이 자립펀드’ 지방특례 적용 건의

전남도는 3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아동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우리아이 자립펀드’ 도입에 대비,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특례 적용을 적극 건의했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국가와 부모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 18세 이하 아동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새 정부 정책공약이다. 장기적인 자산 형성뿐 아니라 교육·주거·결혼 등 사회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다.

전남도는 이날 펀드 도입과 관련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국가 납입금 확대 △지역 정착 조건 충족 시 납입기간 연장과 이자율 우대 등 특례 적용 △저소득층 아동과 다자녀 가구 대상 매칭 비율 확대와 추가 지원 방안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복지부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아동 복지 증진과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양육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인 만큼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아동의 자산 형평성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전남에서 시행 중인 출생기본수당과 연계한다면 더욱 강력한 정책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